

Climate Justice Declaration Movement
GUIDE BOOK

기후정의선언운동
가이드북

체제저변에 대한 기후정의선언운동

글 실는 순서

| | |
|---|-----------|
| 1부 기후부정의를 말하자 | 4 |
| 1. 기후정의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6 |
| 2. 기후정의선언운동에 관한 Q & A | 9 |
| | |
| 2부 기후정의선언운동 기초자료 | 18 |
| 1. 기후정의 개념과 운동의 역사: ‘선언’에서 ‘요구’로, 비판과 반대 넘어 대안의 건설로 | 20 |
| 2.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문제의식: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서 ‘정의로운 체제 전환’으로 | 24 |
| | |
| 3부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주요 선언문 | 28 |
| 1. 발리 기후정의원칙 | 34 |
| 2. 코차밤바 민중 협약 (코차밤바 선언) | 38 |
| 3.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 클리마포럼09 민중 선언 | 48 |
| 4. 그린뉴딜을 위한 페미니스트 의제: 원칙과 가치 | 59 |
| 5. 미래를 위한 금요일 | 65 |

1부

기후부정의를 말하자



1. 기후정의선언운동을 제안하며

“이 비는 장마가 아닌 기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규를 기억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50여 일이 넘는 긴 장마는 한국사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같은 해 한국 정부는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기업을 앞세운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수사는 난무했지만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이 거대하고 치명적 위기가 낳은 ‘전환’의 문제의식은 빠른 속도로 ‘녹색성장’이라는 담론과 정책 틀거리 안으로 포섭되었습니다. 전환을 둘러싼 ‘왜, 무엇이, 어떻게, 누가’와 같은 질문은 자본과 정부의 몫으로 남겨졌고 기층 민중과 사회운동의 역할은 피해자성을 증언하고 개별 주체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가뒀졌습니다.

그러나 사적 이윤을 위해 다수의 존엄을 희생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녹색성장은 기후위기 해결은커녕 새롭고 더 큰 위기를 낳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동력으로 삼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지역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농지를 파괴하며 기후위기 시대 더없이 중요한 농업과 농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구도를 바꾸지 않은 채 진행되는 산업전환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와 실업의 위협으로 떠밀리고 있고,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노예적 삶도 영속화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시정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폭염과 폭우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홀리스와 주거약자의 고통은 빈곤의 낙인 아래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후부정의라 부릅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으며, 우리가 겪어온 위기와 결합된 채로 더 크고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과 존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후와 자연환경, 인간을 비롯한 모든 지구 생명을 지금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은 모든 것을 성장과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만 봤던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위기’와 ‘녹색’을 슬로건으로 내걸지만 이윤 보장을 위한 거시경제 수치 관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현 체제에서 지속가능한 기후생태

시스템과 존엄하고 안정된 삶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어느 지역은, 누군가는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기후위기의 실체는 왜곡되고, 기후부정의는 은폐됩니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자본주의적 생산의 대가는 소수에 의해 독점되고, 그 피해와 책임은 착취당하는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위기에 책임이 가장 적은 지역과 집단이 ‘희생지대’의 역할을 떠맡는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약하거나 취약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은 억압적이고 착취적 체제가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지요.

기후위기가 체제의 불평등과 부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기후-비기후 운동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기후부정의에 맞설 우리의 무기는 기후위기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으로서 기후부정의 현장과 주체들의 권리를 드러내고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의, 구체적 현실에 뿌리를 둔 대안적 상상력, 개별 부문과 영역을 넘어서는 연대, 그리고 이를 통해 더 큰 ‘우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후정의선언운동을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영역과 의제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스스로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기후부정의는 체제와 불화하고 불평등구조에서 소외된 이들 모두를 당사자로 불러냅니다. 각각의 경험과 언어로 기후부정의를 고발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요구를 만들어가면서 기후정의의 빈칸을 직접 채워나갑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가진 전복성을 지켜내고 수치 중심의 기후위기담론이 만들어낸 전문가 중심의 담론구도에 대한 대안을 창출합시다. 이를 통해 기후부정의를 겪고 사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새롭게 규정하고 누가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인지, 전환의 주체인지 분명히 말할시다.

둘째, 기후정의선언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기후위기가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는 말은, 위기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동시에 위기의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불평등한 존재를 함께 인식하자는 제안입니다. 때문에 기후정의로 모이는 길은 다양하고 수많은 과제를 확인하고 풀어내는 공동의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에 종속된 피해와 청원의 구도를 넘어서는

것, 위기의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공동의 체제를 마주하고 싸움의 경로와 연대를 조직하는 것,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대안의 원칙과 방향을 재구성하는 것 모두 우리가 채워야 할 기후정의의 빈칸이자, 주체로 나서기 위한 숙제일 것입니다. 기후정의선언운동의 목표는 완결된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만들어가는 집합적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부정의를 드러내고 기후정의의 요구와 과제를 확인하면서 이를 투쟁의 자양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셋째, 비판과 반대를 넘어 함께 고민하면서 정의로운 대안의 방향, 원칙, 경로를 언어화하고 대안 건설을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이윤중심의 자본동맹은 녹색성장을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기의 책임과 피해를 더 아래로 전가하는 기존의 체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실패의 연속을 멈추고 정의로운 대안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오늘, 기후정의선언은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로 나선 이들의 요구를 모아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더 큰 연대와 동맹을 형성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극복할 대안을 구축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사회적 권력을 모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기후정의선언운동 가이드북은 이런 전망과 계획 속에서 실천적 논의를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후정의선언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는지 살펴봅니다. 이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 또한 이에 기반한 기후정의운동이 태동하고 변화해온 역사적 맥락을 짚어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기후정의(운동)의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중요한 문건들을 소개합니다.

2002년 기후정의의 원칙과 방향, 요구를 최초로 정식화한 ‘발리 기후정의 원칙’ 전문, 201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대지의 권리와 기후변화에 관한 민중협약’, 그리고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라는 슬로건을 대중화시켰던 클리마포럼09의 민중 선언을 소개합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에서 발표했던 주요 선언들을 읽어보며 기후정의(운동)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현실 투쟁의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상상하고 스스로를 이입하면서 기후정의선언 작성과 현실 투쟁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기후정의선언운동에 관한 Q & A

Q1. 왜 기후정의 선언운동인가?

기후위기가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한국사회에서도 대중적 기후정의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기후정의 역시 파괴력을 가진 낱말입니다. 기후정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 보다 아래에 깔린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한계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운동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는 ‘수치’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를 더 낮은 곳으로 전가시키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 싸운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운동과 만납니다. 애초에 기후정의운동은 생태파괴의 관점을 넘어 생태의 위기와 사회적 부정의를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이것이 곧 체제전환의 가능성이자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후정의운동과 사회운동의 만남은 당연한 것처럼 얘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신의 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라는 구체적인 질문 앞에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운동 내 그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찾기 위한 흐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운동은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동시에 기후정의운동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924 기후정의행진은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정의를 알리고 이해하는 것만큼 주체의 상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기후정의운동의 대중적 길이 막 열리고 있는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와 같은 질문들에 구체적인 답을 내려야 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당사자라서, 위기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이라서와 같은 낱작한 서사의 확장과 변주는 어떻게

가능한지 토론해야 합니다.

우리는 출범하면서 세상을 바꿀 거대한 힘이 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동맹을 형성하고 우리가 이 위기의 전환 주체임을 선언했습니다. 위 물음에 답하기 위한 노력은 이 출범 선언의 구체적인 근거와 자기 설득력을 갖추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 운동의 관점에서 기후정의의 재구성하고 해석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극복이라는 지향 속에서 각 운동의 요구들이 우리 모두의 요구이자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일 수 있다는 게 더욱 분명해 질 것입니다.

Q2. 기후정의선언은 누가 어떻게 만드나?

동맹이 가리키는 큰 이정표가 자본주의 체제 전환이라고 한다면 기후정의선언운동은 그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기후정의’라는 다소 크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개념을 각 운동 관점으로 재구성하며 운동의 구체적인 요구와 과제를 만들어갈 때, 전환 세계의 구체적인 상도 가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단추를 기후정의운동 내 다양한 사회 운동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정의선언운동은 고정불변의 원칙이나 완결성을 가진 선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언운동은 단순히 선언문을 쓰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후정의의 그림을 그려 보고 이를 근거로 대중 조직을 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언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언을 넘어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세력을 모으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자기 현실의 토대위에서 이 부정적이고 불평등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말을 버리며,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를 조직하고 넓히자는

제안입니다. 그 끝에 어떤 부문의 선언, 어떤 의제의 선언, 어떤 주체,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의 선언이 나의 선언이자 우리 모두의 선언이라는 감각을 얻으며,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 세력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나 모임 및 지역에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일들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 선언문 성안을 이끌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2) 초안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토론을 조직하는 대중사업을 기획하며 3) 더 많은 사람들이 각 운동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인식하게 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보면 어떨까요. 개별 단체의 회원모임이나 여러단체가 연합으로 혹은 동네나 지역모임 안에서 공동의 문제의식과 키워드를 가지고 모여서 토론을 시작해봅시다. 이 모든 과정들은 같은 속도로 정해진 시간안에 진행하기 보다, 각자의 조건과 형편을 고려해 자기 호흡과 속도를 가지고 간담회나 워크숍,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더 많이 만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Q3. 기후정의선언은 언제까지 만들고 어떤 자리에서 말해지나요?

2023년 하반기 (9월경),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선언대회는 기후정의의 다양한 얼굴과 말과 사유가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얼굴이 드러나고, 말해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퍼지고, 동떨어져보이는 N개의 이해관계 문제를 N개의 보편적인 삶의 문제로 확인하며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발전노동자 기후정의선언은 발전노동자들의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농어촌 풍력태양광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재생에너지 반대가 아니라 민간자본에 의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우리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향한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임을 드러내며 왜

우리가 공공적이고 민주적이며 생태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집요하게 요구하는지,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모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욱 확장되고 깊어지는 기후정의에 대한 각 운동의 힘이 2023년 6월 기후정의선언대회에서 펼쳐지고 결집되며 그 결과 더 많은 기후정의의 주체들이 생겨나고 조직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기후정의선언운동, 어떻게 시작해보면 좋을지 실마리를 주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참조1] 재생산정의 X 기후정의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 SHARE 뉴스레터 일부

세어가 기후정의행동에 함께하는 이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재의 체제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오직 생산성 있는 노동력과 자원만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과 동물 모두 재생산을 통제당해 왔습니다. 연령, 국적, 이주, 장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은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한 재생산 통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돌봄 관계의 구성, 성관계, 피임, 임신·출산·임신중지도 이런 차별과 폭력의 조건에 놓여 왔습니다.

평등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대신, 이윤을 위해 파헤쳐지고 더럽혀진 땅과 물, 거대한 공장, 수많은 유해물질과 심각한 노동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누군가는 이주노동에 내몰렸고, 많은 여성과 소수자들은 막대한 돌봄 노동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진 기후위기로, 불평등한 삶의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재난의 영향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한 생산성만이 목표가 되어 재생산을 통제하려는 세계에서 우리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성건강과

재생산 건강 또한 더욱 쉽게 침해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심각하고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와 재생산정의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참조2] 장애인권리 X 기후정의

924기후정의행진x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에서 전장연 건강권위원회 정창조 활동가 발제 중에서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근본원인은 결국 현 생산시스템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도 현 생산시스템이지요. 장애인운동과 기후정의운동 간 연결고리에 대한 고민이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결국 장애인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는 투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장연이 열심히 싸우는 주제가 대표적으로 탈시설 이슈가 있습니다. 탈시설을 제대로 할려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기후위기와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의 원인은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죠. 코로나 사태 초반, 한국에서 유난히 빠르게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청도대남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코호트 격리되었던 시설 수용인 104명중에 102명이 감염됐고, 7명이 돌아가셨어요. 2021년 2월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중에 52.3%가 집단 거주 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후위기가 낳은 코로나가 결국에는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이윤 중심 노동세계의 돌봄시스템으로는 시설 바깥에 사는 사람도 제대로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탈시설 운동에 대한 반발도 등장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후운동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장애인운동의 요구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을 없앤다고 하면 그 시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곧바로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사회에 질 좋은 돌봄 일자리들이 공공 차원에서 적절하게 마련된다면, 이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반발을 심하게 할까요? 장애인 당사자도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설 안에서 수용되어 살아갈 필요도 없어지고, 시설 노동자들도 더 이상 시설에서의 노동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이윤 중심 일자리가 아닌 필수노동,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돌봄 중심 일자리가 유난히 주목받는 것도 그래서겠지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질 좋은 돌봄 노동을 많이 만들고 활동지원서비스 제대로 제공하는 건 곧 장애인이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질 좋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탈시설 문제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탈시설 운동이나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투쟁은 기후정의운동과 서로 다른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시설 운동이 승리를 하려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 질 좋은 일자리의 내용이 돌봄 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오.

[참조3] 성소수자인권 X 기후정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월레토론 참여자 후기

“운동이 쉽지 않고 세상이 끄떡하지 않았으며 백래시가 격해지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 제도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성소수자 시민들에게 허용되었던 영역은 ‘시장’, 특히 ‘소비 시장’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쓰는 것은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퀴어 아이덴티티를 새긴 한정판 운동화를 살 수 있었고, 동성

커플이 호캉스를 보내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도 제지받지 않았으며, 품앗이를 하듯이 서로가 만든 귀여운 굿즈를 사주었습니다.

우리는 신혼부부에게 허용되는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포기하거나 “이혼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선에서 도시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을 위협하며, 어쩌면 성소수자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의 성소수자들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도시적 삶마저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처할 자원의 유무에 따라 커뮤니티가 쪼개지고, 머지않아 “기후위기에 맞서는 퀴어들” 혹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집단을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원인으로 소수자를 지목하는 혐오 정치가 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4] 청소년 X 기후정의

대안학교 청소년 기후정의연대 선언문

우리 대안학교 청소년 기후정의연대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하기 위해 모인 연대체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힘을 조직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려 한다.

우리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다. 그렇기에,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가능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우리 대안학교 청소년 기후정의연대는 지금의 체제에 굴복하지 않는 연대체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1. 기후위기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산업화 이후 이뤄진 폭발적인 경제성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를 만들어냈고, 그 동력으로 화석연료가 사용되었다. 이윤을 모든 것의 앞에 둔 결과, 외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무한히 팽창하려고 하지만, 지구는 유한하다.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선택권은 소수의 기업과, 자본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2. 기후위기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은, 비민주적인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에 해당하는 빈곤하고, 권력이 없는 존재들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지금의 정치는 소수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대변한다. 소수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삶과 지구 환경을 희생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치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3.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기후위기는 세계 부유층들의 삶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그 피해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세계 빈곤층들의 삶부터 파괴 시킨다. 우리는 재난 책임자와 피해자가 다른 상황을 부정의하다고 바라본다. 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수의 인간들을 빈곤과, 힘겨운 삶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반면 소수에 해당하는 부유층 인간들은 자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부를 축적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며, 부정의 그 자체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서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4. 지금의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이다. 성공이라는 이름 앞에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경쟁 사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 현장까지도 침투해 있다. 자본주의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가진 스펙과 사회적 지위, 부에 의해서 평가되며, 청소년들은 시험 성적표로 평가되는 상품의 일종이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는 사회를 원하며 교육 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비인간적이고 과도한 경쟁에 반대한다.

5. 주류 공교육의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은 인간을 획일적으로 길러내며, 주체적인 삶이 아닌 사회 평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 현재 가속화되는 탈정치화 사회 현상은, 인간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사유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의 상실로부터 온다.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교육이 그 상실을 불러온다. 우리는 청소년들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탈정치화 현상을 비판하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자신과 사회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교육을 원한다.

6.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유지 시키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반대하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안 사회를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생태적 한계 속에서 돌아가며, 모두에게 사회적 기초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유한한 지구에서 이윤을 위해 무한히 팽창하는 사회가 아닌 모두의 존엄한 삶의 필요에 따라서 돌아가는 사회이다. 그런 세상은 자신과 사회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지배와 경쟁이 아닌, 공존과 협력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하며, 그것은 가능해야 하고, 가능해야만 한다.

7.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개인의 것으로 축소 시키는 탈정치화 된 해결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며 국가와 기업의 거짓 선동에 속지 않는다. 개인의 작은 실천은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국가를 움직이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며, 힘없고 배제된 자들의 연대를 이뤄내고, 기존의 질서에 반대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시작하자.

- 2022년 8월 28일 대안학교 청소년 기후정의연대 일동.

2부

기후정의선언운동 기초자료



1.

기후정의 개념과 운동의 역사:

'선언'에서 '요구'로, 비판과 반대 넘어 대안의 건설로

기후변화 혹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이후 1992년 리우 환경회의가 열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었고 1995년에는 첫번째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후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고 화석연료 산업은 체계적인 가짜 뉴스 생산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렸던 COP3은 경제발전을 이룬 37개국에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고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 배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를 주요 방법으로 삼은데다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빠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정책수단입니다. 정부가 기업 등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면 기업은 정해진 배출허용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을 허용 받습니다. 배출허용범위 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기업은 그만큼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허용범위 보다 더 많이 배출한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배출허용량과 배출권 지급의 기준이 모호해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배출권이 무상 혹은 너무 낮은 가격에 주어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고도 배출권 판매를 통해 기업이 수익을 남긴 경우도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배출권 구매할 자본만 있으면 배출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탄소중립 휘발유'도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COP 등 기후 관련 국제회의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판치고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지 못하는 시장주의적 해법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고 '인간의 얼굴'을 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세계 각국의 민중 단체와 환경운동단체들이 모여 2002년 '발리 기후정의원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은 기후변화를 야기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기후변화로 영향받는 공동체들의 당사자성과 권리 강화를 명확히 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포집저장 등 시장주의적, 기술적 해법에 대한 반대와 '비용의 외부화' 없는 해법을 주장하며 오늘날 기후정의운동의 기반을 다졌습니다(4장 참고). 발리 기후정의원칙은 1991년 17개 항의 환경정의 원칙을 제시했던 미국의 '전국 유색인 환경 리더십 총회'의 환경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했는데, 미국의 환경정의운동은 60년대 시민권 운동의 맥락 속에서 억압의 대상인 흑인과 선주민 등 유색인종 차별과 사회정의, 환경 의제의 결합을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기후정의운동은 처음부터 사회정의와 생태파괴의 문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정의 원칙

1991년 발표된 환경정의 원칙은 생태 파괴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할 의무, 모두가 차별 없이 수혜 받는 환경정책 마련, 토지와 지구 자원의 책임있는 사용, 핵실험 반대, 각종 유기 폐기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모든 정책에 당사자들의 형평성 있는 참여, 노동자 안전과 건강, 환경 부정의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배상 등 17개 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발리 기후정의 원칙은 기후정의의 원칙이 처음 정초되는 의미를 가졌으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계속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강화해나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열린 2009년 코펜하겐의 COP15는 전지구적 기후정의운동의 서막을 알리며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정 책임을 의결했지만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기후협약에 실패했고 1000억 달러 재정은 아직까지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30개국 3만명이

넘는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다음 해인 2010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 모여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를 개최하고 반자본주의, 반식민주의, 생태주의 지향을 명확히 하는 '민중협약'을 의결했습니다. 코차밤바 민중협약은 자연과 인간, 모든 생명이 깨끗한 환경에서 존중받고 살 권리를 주장하며 발전을 이룬 선발 국가들이 지구 생태계와 후발 국가들에 진 빚이 있음을 천명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차별화된 책임과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적 추출경제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농민과 선주민의 권리를 정식화했습니다(4장 참고).

국제 기후정의운동이 아래로부터 만들어낸 압력의 결과 2015년 파리협약(COP21) 전문에는 차별 없는 인권, 형평성 원칙, 빈곤 퇴치와 차등화된 책임성, 정의로운 전환 등의 문제의식과 함께 "기후정의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기후정의의 문제의식이 수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 천명에 머물렀던 기후정의 개념은 이후 투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 제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선주민 지역을 오염시키는 송유관에 반대하는 '스탠딩 락'에서의 투쟁은 "오늘날 존재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최일선 당사자들에 대한 억압과 부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미국의 '그린뉴딜 결의안'으로 이어졌고, 그레타 툰베리에서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글로벌 기후파업은 작년 9월 '#체제를뒤엎자'는 구호 아래 역사적으로 부정의한 체제를 통해 이득을 봤던 북반구의 급격한 배출량 감축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역과 사람들'(MAPA)에 대한 배상, 공정한 백신 공급과 남반구의 부채 탕감, 그리고 남반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과 같은 요구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작년 글래스고우에서 열렸던 COP26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남반구가 겪어야 했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손실'에 대해 북반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요구를 둘러싸고 격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더 격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초기 비판이나 선언의 형태로 다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문제의식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들로 정식화되었고 지역에서부터 정의롭고 재생적인 대안적 경제를 건설한다거나 억압받는 풀뿌리 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은 2011년 '기후정의연대'라는 연대체로 잠시 모습을 드러냈으나 곧이어 터진 후쿠시마 핵사고 등의 영향으로 문제의식의 큰 확산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기업 주도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중의 삶과 기후생태 파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기후정의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후정의를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후정의선언운동은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내세워 기후 불평등만 강화시키는 기업 중심의 소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바탕으로 각 부문과 현장의 투쟁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정식화함을 통해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문제의식: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서 '정의로운 체제 전환'으로

기후정의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도 최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나 실천적 적용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경제(혹은 노동)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따라 기후위기 대응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주류 담론은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에서 불가피한 '피해의 최소화'나 고용불안에 따른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이는 무척 협소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나 일자리 문제를 넘어 '전환'이란 단어가 지칭하듯 사회체제를 바꿔내는 문제의식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국제 기후정의운동은 고용이 인간의 안정된 삶과 존엄성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도 대안적 생태사회와 미래의 일자리를 상상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사고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의식은 처음부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노동자와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과 생존을 방어하고 개선하려는 현실 투쟁의 맥락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동조합 리더였던 토니 마조치는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체가 환경과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환경과 좋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1973년 환경운동가들과 손을 잡고 미국 네 개 주에 걸쳐 있던 셸(Shell) 석유정제 공장으로 인해 위협 받던 노동자 및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 이슈를 가지고 최초의 환경 파업을 조직했고, 이 문제의식은 다른 지역과 노동조합으로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1980년대 미국에서는 오염 지역에서 위험 물질 제거를 위한 정책과 법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미국 5대호 수질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곧이어 1997년에 발족한 '정의로운 전환 동맹'은 '적록연대'의 깃발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캐나다 노동자 총연맹은 '정의로운 전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각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노동과 지역사회, 환경 이슈를

접목시키는 투쟁이 확산되었습니다.

형평성

영어 명사 equity(형평성) 또는 그 형용사형인 equitable(형평성 있는)은 역사문화적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형평성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평등(equality)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등'이 "모두에게 똑같이"와 같이 문제해결에 있어 형식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형평성은 억압과 배제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조건과 (인종, 젠더, 계급 등) 차별의 맥락을 고려해 과거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오랜 세월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송전탑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넘어 과거의 피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 개념이 담고 있는 지향입니다. 국제 기후정의운동이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적응'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이 '피해와 손실(loss and damage)'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면에서 '형평성'은 '평등'보다 급진적인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 기후정의운동은 평등 대신 형평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맥락은 사라지고 형평성이 때로는 '공정'과 같은 개념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는 국제사회에서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 국제자유노련(ICFTU)는 "노동자들은 기후변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부담의 문제와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해 '형평성 있는'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을 선언했고, 이후 2000년대를 거치며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06년 설립된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은 초기부터 환경과 노동의 접목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고, 많은 노동조합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직업 안전과 기후환경 문제를 결합시키는 일상적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진보적 가치나 개념과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확산은 제도화/

체제내화 과정을 수반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이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을 가능케 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그린딜'을 발표했는데, 폴란드 같이 석탄발전 의존이 큰 지역의 저항을 완화하고 녹색성장 기조에 따른 산업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하게(effective and fair)'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보다 평등하고 생태적인 대안 경제의 모색이나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확대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대신 산업전환으로 인해 영향 받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체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통해 기업의 운영과 창업, 연구와 혁신, 청정 에너지 개발, 환경 보존, 노동자 재훈련 및 구직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업 주도의 녹색성장을 보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축소 적용된 것인데, 한국에서는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진보적인 대안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입니다.

반면 2019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그린뉴딜 결의안'은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위기와 임금 정체 등으로 극대화된 사회불평등 동시 극복'을 목표로 제시하며 '모두의 번영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그 방법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보장되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수백만개 창출'이라는 목표와 함께 선주민, 유색 커뮤니티, 이주민, 시골 공동체, 빈곤층, 여성, 노인, 무주택자, 장애인과 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 공동체'를 일일히 호명하며 이들에 대한 '역사적 억압을 멈추고, 미래의 억압을 방지하고, 과거의 부정의를 시정'해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정의로운 전환을 착취적 추출경제에서 재생적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치와 경제 구축의 통합적 비전'이자 '과거의 피해를 시정하고 배상을 통해 미래의 보다 평등하고 새로운 권력 관계를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해왔던 미국 기후정의동맹의 문제의식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의로운 전환은 기업이 주도하는 녹색 전환의 보조 기제로 이해될 수도 있고 과거의 억압과 부정의를 시정함으로써 모두의 안정된 삶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대안적 사회로 나가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자와 서민,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주도 녹색 성장 정책에 맞서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보다 확장되고 공세적인 정의로운 전환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이 투쟁의 주체는 이미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로 당장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비정규 석탄 노동자들을 비롯해 산업 전환에서 피해가 예고된 노동자들, 민간 기업이 건설하는 화석연료 발전소에 저항하고 핵발전소나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과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 등에 더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인 CPTPP로 고통 받게 될 농어촌 지역 주민들, 그리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활동가들. 이들이 힘을 모아 보다 공공적이고 민주적이며 생태적인 에너지 체제의 밑그림을 그리며 '지원과 보호'와 같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정의로운 체제 전환의 주체로 스스로를 권력화해 나가고 대안 제시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3부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주요 선언문



1. 발리 기후정의원칙
2.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 클리마포럼09 민중 선언
3. 코차밤바 민중 협약 (코차밤바 선언)
4. 그린뉴딜을 위한 페미니스트 의제: 원칙과 가치
5.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글로벌 기후파업 취지문(2021, 2022)

소개의 글

마지막 3부에서는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주요 선언문 혹은 문서를 번역해 소개합니다.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와 1995년 첫번째 기후변화당사자국회의(COP)을 개최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997년에는 ‘공통의 하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아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구하는 교토의정서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교토의정서에서 빠지고, 의무 감축에 참여했던 36개 국가가 배출 감축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기만 했습니다. 유럽을 위시한 북반구 국가들이 고배출 산업을 남반구로 ‘외부화’한 결과이자 복잡한 섀범을 통해 ‘배출 감축’을 증명하고자 한 결과였습니다. 실제 많은 연구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부터 1990년까지 인류가 배출한 탄소에 비해 1990년 이후의 탄소 배출이 같거나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1990년대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주창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신자유주의가 아무런 견제없이 전세계적으로 확장되었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탄소포집저장, 전기차 확대나 스마트팜 등 자본에 유리한 시장주의적, 기술주의적 기후변화 대응만이 해법으로 제시되었으니까요.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선언과 주장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해법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발리 기후정의원칙’은 교토의정서가 비준되고 발효되기 전 논쟁의 맥락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북반구 정부와 기업들이 주도하며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던 국제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로 기후변화로 이미 피해를 보고 있던 선주민, 작은 도서 국가, 지역 공동체, 여성 등등 억압과 차별을 받던 이들을 처음 내세우며 기후정의운동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부 ‘기후정의 개념과

운동의 역사’에서 발표의 취지와 맥락을 소개해드린 바 있으니 다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부터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에 비해 실제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점차 세력을 키워가던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실망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국제 기후정의운동은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모인 COP15에 맞서 ‘대안 컨퍼런스’로 클리마포럼09를 조직해 기후정의 원칙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의 경로를 토론했습니다. 클리마포럼09에는 반다나 시바, 나오미 클라인 등을 비롯해 5만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해 300개가 넘는 세션을 통해 논쟁을 벌였고, 이를 통해 결의된 대안적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을 담은 민중 선언을 COP15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며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포기하지 못한 국가와 기업들로 인해 COP15는 큰 실패로 기록되었고, 이에 반비례해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라는 구호의 설득력은 커지며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은 국제 기후정의운동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북반구 국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클리마포럼09는 북반구 기후환경 단체와 활동가 중심의 참여와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베네주엘라, 브라질, 볼리비아 등 남미에 들어섰던 좌파 정부들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반대하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고, 최초의 선주민 출신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COP15에서 강력하게 자본주의적 기후변화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정부는 석유에 의존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반기후적 전략을 취했습니다]. 모랄레스는 2010년 남반구가 주체가 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오랜 선주민 투쟁의 현장이자 강력한 정치적 기반인 코차밤바 외곽에서 ‘기후변화와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코차밤바 민중 협약’ 혹은 ‘코차밤바 선언’은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3만여 명이 모여 진행된 세계 민중회의에서 합의된 선언문입니다. 코차밤바 선언은 명료하게 기후변화의 책임 소재와 함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지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 기후 및 환경정의 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의 설립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적 이원론에 갇혀 있지만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데, 이는 오랜 선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듬해 세계 민중회의를 개최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코차밤바 세계 민중회의와 민중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 기후정의운동의 목소리는 계속 커졌고, 이는 형평성,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등이 포함된 2015년 파리협약의 전문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파리협약이 합의된 COP21을 후원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파리협약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그 내용이 정해졌고 여전히 시장주의적이고 기술주의적인 해법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파리협약 3년 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발표된 “1.5도 특별보고서”는 파리협약의 계획만으로는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기 힘들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국제 기후정의운동에서는 이제 더이상 국제사회의 소위 ‘지도자’라 하는 이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글로벌 기후파업이 시작되고 영국의 멸종반란과 미국의 썬라이즈무브먼트의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 행동이 시작돼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 때입니다.

영국에서는 멸종반란의 주도 아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회’가 주창되었고 미국에서는 기후정의운동을 비롯한 아래로부터 사회운동들의 다양한 요구를 집대성한 ‘그린뉴딜’이 핵심 의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2019년 초에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두 축으로 한 ‘그린뉴딜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고 그린뉴딜은 지금까지 노동조합, 기후정의단체, 선주민과 유색 공동체, 여성 등 지금까지 억압받아왔던 공동체들의 요구를 담은 급진적 사회운동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그린뉴딜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는데, 기후정의운동이 오래 비판해왔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거짓 해법들’에 대한 비판에 더해 재생산 정의, 재생과 돌봄 경제 등 페미니스트 의제와 분석틀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의 그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그린뉴딜은 영국과 미국에서의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미국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국가, 계급, 인종, 젠더, 장애 여부, 나이 등을 포괄하는 교차적 기후정의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기

좋은 텍스트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2021년과 2022년 글로벌 파업을 준비하면서 제시했던 짧은 텍스트를 소개합니다. 많이 알려졌으나, 그레타 툰베리가 매주 금요일 스웨단 의회 앞에서 벌인 1인 기후파업을 촉매제로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글로벌 기후파업은 이후 전세계로 퍼졌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글로벌 기후파업은 애초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험을 통해 지도자들의 ‘블라블라블라’에 맡겨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고, 또한 남반구 청(소)년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반구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후위기의 현재성과 파괴성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의 극심한 피해가 궁극적으로는 북반구의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남반구에 대한 북반구의 역사적 억압과 착취의 결과라는 점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급진화되었고, 점차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남반구 민중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려는 노력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두 텍스트도 이런 과정을 통해 변화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국제 기후정의운동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5개의 선언문 혹은 문서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선언문, 성명서, 문서들이 있겠지요. 각기 다른 역사적 조건과 기후정의운동의 맥락 속에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이 이 선언문들을 소개하는 것도 한국의 역사적 조건과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맥락을 잘 반영하는 한국의 기후정의선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소개하는 선언문들이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을 넘어 한국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뾰족하게 베풀어내는 읽기와 토론을 위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판 기후정의선언문의 주체는 우리 모두입니다.

1. 발리 기후정의의 원칙 (2002)

기후변화는 그 여파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과학적 사실인 까닭에, 화석연료 소비, 산림파괴, 기타 생태 파괴가 현재의 속도로 진행될 경우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농업 형태의 변화, 그리고 홍수, 가뭄, 생물다양성 파괴, 극심한 태풍과 감염병 등 자연재앙의 빈도와 규모 증가로 귀결될 것이 분명한 까닭에, 산림 파괴는 광범위한 지역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까닭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는 탐사와 추출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간 공동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까닭에, 기후변화, 그리고 이와 연관된 현상들은 지역 차원의 변화가 전지구적으로 표현된 것인 까닭에,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기업 주도 세계화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는 까닭에, 기후변화가 산업화된 국가들과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까닭에, 초국적 개발은행, 다국적 기업과 미국을 비롯한 산업화된 국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유엔의 민주적 성격을 손상시켜 온 까닭에, 기후변화는 세계인권선언과 대량학살에 대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는 까닭에, 기후변화는 작은 도서 국가, 여성, 청년, 해안가 주민, 지역 공동체, 선주민, 어촌 공동체, 빈곤층과 노년층에 비대칭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까닭에, 지역 주민,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들과 선주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지구적 논의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왔던 까닭에, 오늘날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시장주의적 기제와 기술적 해법들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짓 해법인 까닭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와 다른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 문제의 뿌리를 이루는 까닭에, 이와 같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가 북반구와 남반구의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대다수 남반구 주민과 ‘북반구 안의 남반구[역주:

북반구 선주민, 유색인종, 빈곤층 등 억압받는 집단]에 가장 치명적일 것인 까닭에, 기후변화는 식량주권과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들의 경제적 안정을 심대히 위협할 것인 까닭에, 기후변화는 어린이와 노년층 등 주변화되고 취약한 집단을 포함한 지구상의 많은 공동체들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인 까닭에,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일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소비, 생활양식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수반해야 하며 산업화된 국가들이 이 전환에 앞장서야 하는 까닭에, 우리, 민중운동의 대표자들과 사회정의의 환경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조직들은 다음의 핵심 원칙에 따라 기후정의를 위한 모두의 국제적 운동을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1. 지구의 신성함, 생태적 통일성과 모든 생물종의 상호의존에 대한 지지에 기반해 기후정의는 모든 공동체가 기후변화와 연관된 모든 영향, 다른 형태의 생태적 파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기후정의는 온실가스 및 연관된 오염원의 완전 제거를 장기적 목표로 삼아 온실가스 및 오염원 배출을 감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기후정의는 선주민과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스스로를 대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
4. 기후정의는 각 정부가 시민 앞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은 보편성을 가지지만 차별화된 책임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5. 기후정의는 특히 부정적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국적이고 국제적인 노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6. 기후정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생활양식을 양산하면서 일국적, 국제적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국적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는 것에 반대한다.
7. 기후정의는 산업화된 국가들과 초국적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지구의 자정능력을 파괴한 결과 나머지 국가들에 지게 된 ‘생태적 빚’ 원칙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8. 기후정의는 생태적 및 원칙에 입각해 화석연료를 비롯한 추출산업의 온실가스 및 기타 오염원 발생으로 인한 과거와 현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9. 기후정의는 생태적 및 원칙에 입각해 기후변화와 연관된 부정적 영향의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과 회복, 토지와 생계 등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
10. 기후정의는 모든 신규 화석연료 탐사와 추출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전세계 모든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대규모 수력발전 건설 계획 중단을 요구한다.
11. 기후정의는 모든 생명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깨끗하고 재생가능하며 지역적으로 통제되고 지구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된 에너지 자원을 요구한다.
12. 기후정의는 빈곤층, 여성, 시골 주민, 선주민을 비롯해 모두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불가능한 가격에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13. 기후정의는 탄소배출권 거래나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시장주의적이거나 기술주의적 해법은 민주적 투명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4. 기후정의는 추출산업, 화석연료산업, 기타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와 실업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15. 기후정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해 환경이나 지역 공동체에 비용을 외부화하지 않는 기후변화 해법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16.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영향으로 인한 문화적 전통이나 생물다양성의 멸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17. 기후정의는 깨끗한 공기, 땅, 물, 식량과 건강한 생태 시스템을 보장하는 사회경제 모델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18. 기후정의는 자연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며 문화를 일구는 공동체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그 자연자원을 소유 및 관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자연과 자연자원의 상품화에 반대한다.
19. 기후정의는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상호 존중과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정책을 요구한다.

20. 기후정의는 선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땅에 대한 통제권, 영토와 자원에 대한 권리, 거주 영토와 문화적 삶의 양식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1. 기후정의는 선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사전 평가, 계획, 집행과 평가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사전통보승인 원칙의 엄격한 집행과 '아니오'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22. 기후정의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23.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부정적 영향에 대처함에 있어 청(소)년이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24. 기후정의는 군사적 행동, 점령, 탄압과 더불어 땅, 물, 바다, 사람과 문화, 다른 생명 형태에 대한 군사적 착취를 반대하며 군사주의에서 화석연료 산업의 역할에 특별히 주목한다.
25. 기후정의는 체험된 삶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존중하는 기후, 에너지, 사회와 환경 이슈에 대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요구한다.
26. 기후정의는 개인이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최소로 소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양식에 도전하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는 의식적 선택을 하고, 자연환경과 지구와의 윤리적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깨끗하고 재생가능하며 지구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된 에너지를 사용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세계의 건강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개인이자 소비자로서의 선택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7. 기후정의는 미래 세대가 자연자원과 안정적인 기후, 건강한 지구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2.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 클리마포럼09 민중 선언 (2009)

1. 서문

기후위기의 해법은 존재한다. 인간과 지구에게는 모두의 존엄과 모든 생명의 권리를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보다 비옥한 지구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사회로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은 연대의 원칙,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반차별, 성평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기반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 기반 프레임에 입각한 새로운 인식과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권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의무가 있다.

우리, 코펜하겐 클리마포럼09에 참여하는 민중, 지역사회와 모든 조직은 모든 개인, 조직, 정부, 그리고 유엔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이 필수적인 전환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분명 도전적인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의 위기는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역적, 이념적 측면에서 상호 작용하며 강화되고 있다. 기후, 에너지, 금융, 식량 그리고 식수 위기가 결합된 지금의 위기는 기후위기 해결책을 막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지배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통합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환경과 기후에 대한 부채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핵발전, 농업연료[역주: 팜유 등 농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료], 탄소상쇄, 탄소포집 및 저장(CCS), 바이오숯, 기후공학[역주: 지구 기온을 낮추기 위해 성층권에서 햇빛을 차단하는 분말을 뿌린다거나 바다에 영양분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 방법을 통해 기후시스템을 조절하려는 기술공학 분야], 탄소거래와 같은 거짓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해결책을 홍보하거나 채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재생가능한 자원과 에너지 보존 기반의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연령, 젠더, 민족, 종교, 지역사회, 국적을 대표하는 사회 운동과 부문을 가로지르는 연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청년,

여성, 남성, 노동자, 농민, 어민, 선주민, 유색인종, 도시 및 농촌 사회 집단의 강력하고 대중적인 운동과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을 구축해 우리가 미래의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우리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G8, G20 혹은 기타 폐쇄적인 강대국이 아닌 강력하고 민주적인 유엔을 지지한다.

2. 우리가 마주한 도전

이미 너무 높아진 대기 중 온실 가스(GHG) 농도는 기후 시스템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지난 50년 동안 CO2 농도와 지구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생태학적 불균형을 가중시키며, 전 세계 사람들 특히 빈곤층 및 불평등 구조에서 차별 당하는 집단들의 생명과 생계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기후 시스템의 불균형은 극심한 더위와 강우 패턴, 열대성 사이클론, 허리케인과 태풍, 극심한 홍수와 가뭄, 생물다양성 손실, 산사태, 해수면 상승, 식수 부족, 재배기간 축소, 수확량 감소, 농경지 손실 또는 악화, 농업 생산량 감소, 가축의 죽음, 생태계 멸종, 어종 감소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 위기, 기근, 질병, 사망, 이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의 종말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GMO(유전자 조작 생물체), 단일 재배 농업 및 산업화된 농업이 도입되고 있는데 모두 기업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곧 생태계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소농을 소외시키고 빈곤하게 하며 식량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 기업 주도형 농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보다는 북반구의 과잉소비를 인해 부풀려진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지역 공동체의 생명과 생계를 파괴하는 현대의 산업화된 어업, 집약적 임업 및 광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기후변화의 결과는 이미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되어 우리가 공유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수백만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중들은 이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를 파괴적 환경파괴로 이끄는 힘과 원인에 맞서고자 하는 대중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중남미, 북미와 유럽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운동은 외국 자본의 토지 착취에 맞서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행동주의가 환경 운동을 활성화하여 광산, 댐, 삼림 벌채, 석탄 화력 발전소, 여객기 여행, 신규 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다양한 시위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경제 패러다임이 매우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다양한 대안적 삶의 방식도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오늘날 권력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위협을 직면하고 대처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도 명백해지고 있다. 이른바 '녹색성장'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전략이 환경파괴와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경제발전 기본 모델을 변함없이 추구하기 위한 변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우리가 이해하는 [기후변화의] 원인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산업과 상업, 운송 및 군사적 목적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한 결과 전례없는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된 탓이다. 기후변화의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선주민의 지속가능한 순환농법을 제외한) 산림황폐화, 삼림벌채, 추출산업, 물의 순환 교란, 토지 수탈을 통한 산업농업 확대, 공장식 축산의 증가 및 기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자연자원 사용을 들 수 있다.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통제와 소유

이상 언급된 직접적인 원인들은 지구의 제한된 자원과 혜택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이라는 원칙에 뿌리를 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지구적 경제체제의 결과이다. 이 경제 시스템이 전제로 삼는 것은 엘리트에 의한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공유지의 전유이다.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재앙과 발전의 위기는 기술, 생산, 진보와 같이 대단한 성과라 극찬받았던 것들로부터 촉발되었다. 그럼에도 특권을 가진 글로벌 엘리트들은 이윤을 위한 무분별한 생산과 과도한 소비에 빠져 있고, 반면 인류의 다수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만 허용되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현실은 남반구만이 아니라 북반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북반구와 곳곳의 조세 피난처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의 초국적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과잉'의 선봉에 서왔다. 더 많은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1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추가함

글로벌 기업과 부유한 국가 간의 경쟁과 각종 무역협정들은 남반구 자원에 대한 남반구 민중의 정당한 소유와 통제의 권리를 짓밟으며 이들에 대한 신식민지 지배로 귀결되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금융기관,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공공자원의 민영화와 상품화를 촉진하고, 남반구 자연자원에 대한 약탈을 강화하는 가운데 자신들에 대한 저개발 국가의 의존도를 높이게끔 강요하고 있다.

주류적 사고와 새로운 대안

이러한 기구들이 추진하는 발전 모델은 '경제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배적인 경제 패러다임은 인간을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상상하는 개념에 기반을 둔 사고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이기주의, 경쟁, 물질적 소비, 사적 부의 무한 축적을 조장하는 기업 미디어 및 마케팅 회사에 의해 강화되며 그러한 행동의 사회적, 생태적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다. 이 사고 체계는 가부장제와 온정주의적 양식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간절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인류가 자연과 사회의 일부이며 상호의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지의 온전함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문화 내 그리고 문화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의 세계 시민이다. 우리 모두는 보다 큰 인류와 생명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인간의 결속과 모든 생명과의 연대 정신은 '다수 속 하나'라는 원칙 속에서 강화된다.

4.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이 의제는 정부와 다자간 국제기구 정책 입안자들의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 변화이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가 아니다. 기후 의제는 기술의 무비판적 사용과 강력한 이해 관계에 매여있는 시장에 의해 간혀있다. 대중운동은 기후, 물, 식량 및 경제 위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대안적 사회 비전과 구체적인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전환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작될 수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치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식량주권 및 생태적 농업: 민중, 지역사회, 개별 국가가 생산 시스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생산 시스템은 농업, 어업, 식량, 임업 및 토지 정책을 포함하며, 해당 정책들은 생태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기후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민중, 특히 여성의 토지, 종자, 물과 같은 생산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농업 생산은 반드시 지역적 지식과 적절한 기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고 자생 식물 시스템 속에 저장하고, 물을 흡수하며,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빼앗기 보다 더 많은 양분을 토양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 및 농업 생산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필요를 충족하고, 자급자족을 장려하고, 지역 고용을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 자원 사용,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 민주적 소유와 경제에 대한 통제: 민중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인 소유 및 통제 형태를 중심으로 사회의 생산 단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기본적 필요란 고용창출, 물, 주거, 토지,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접근, 식량 주권,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같은 것이며, 공공 정책은 금융 시스템이 공공 이익에 기여하고 산업, 농업 및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소비의 감축, 특히 부유한 국가에서의 극적인 소비 감소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태양열, 풍력, 지열, 소규모 수력, 파도 및 조력과 같은 재생 및 공공 에너지원과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자립적 배전망의 개발과 송배전망의 공공적 소유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 농촌과 도시의 생태적 계획: 이 계획의 목표는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 및 오염물질 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역기반으로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사회 정의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공공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도시 및 농촌 계획은 운송의 필요성을 줄인다. 경전철 및 고속철도 시스템, 자전거와 같은 대중 교통 시스템을 촉진하고 자가용의 필요성을 줄여 도로 정체를 완화하고 건강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킨다.

- 교육, 과학 및 문화: 공공 연구와 교육은 상업적 이윤과 독점 기술을

개발하려는 현재의 편향에서 벗어나 사람과 환경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연구 개발은 기본적으로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시도여야 한다.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철폐하고, 국가 간에 적절한 기술, 전통적 지식, 고유한 혁신적 관행 및 아이디어의 공정하고 정당한 교환이 장려되어야 한다.

- 군국주의와 전쟁의 종식: 현재의 화석 연료 기반 발전 모델은 에너지, 토지, 물 및 기타 천연 자원의 통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폭력, 전쟁 및 군사적 갈등을 보여왔다. 이것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점령, 그리고 화석 연료와 기타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군사화로 입증됐다. 농민과 선주민 공동체는 농업 연료 농장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땅에서 폭력적으로 쫓겨나고 있다. 군산복합체에 수십억 달러가 사용되어 막대한 물질 및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전환을 실행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실행을 통해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전환이 더 만족스럽고 좋은 삶을 약속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정치, 경제, 환경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일관된 전략은 반드시 이 모든 분야를 아울러야 하고, 이는 실제로 지속가능한 전환 개념의 핵심 아이디어다.

이 개념의 핵심적 지향 중 하나는 글로벌 시장이 아닌 지역 사회를 사회, 정치, 경제의 기본 단위로 복원하는 것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이 복원될 때 사회적 응집력, 민주적 참여, 경제적 책임, 생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소수민족 문화와 지역 사회에서 배운 기본적인 교훈이다.

지역공동체 기반 접근은 광범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상충하지 않는다. 반대로 농업, 임업, 수산업, 산업의 직접 생산자 사이의 모든 경계를 넘는 더 강력한 연결과 연대를 요구한다. 또한 연대는 굳건한 성평등과 모든 수준에서 부당한 권력 관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만 구축될 수 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수자원과 같은 공통의 공유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더 강력한 지역 및 국제 협력 협정도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 협력을 통해 모든 경계를 초월한 아이디어, 기술 및 전문성의 완전한 상호 교환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타문화간 열린 대화가 촉진될 것이다.

5. 전환의 경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 체제 안에서 샘솟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위해 애쓰는 다양한 사회 부문, 노동 조합, 소비자, 도시 거주자, 교사 및 연구자 간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유엔과 유엔당사국총회(COP)

우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협상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의제를 다룰 제15차 당사국 총회(COP15)에 주목해야 한다. 이전까지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상황이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와 이후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공동 행동을 약속하며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계획이 시작되었음에도 결과는 미미하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협약과 의정서의 원칙, 목표 및 일정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상황은 되려 악화되었다.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데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기업의 이해 관계가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대신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젠더, 피부색, 나이, 장애 여부 등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속의적인 당사자 논의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안에 모든 정책과 정책 도구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제 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수단을 통해 지구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균형을 회복하고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의 요구

우리는 목소리 높여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지도자들이 민중을 위한 요구와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1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 우리는 향후 30년 안에 화석연료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5년 단위의 구체적인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이 즉각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이루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2 기후 부채 및 기후 범죄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우리는 북반구 국가와 초국적기업 및 조세 피난처에 의해 수탈당한 남반구 국가들과 그 곳의 사람들에게 대한 완전한 배상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선주민 공동체들에 대한 대학살과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 식민지 시대와 침략으로부터 비롯된 불평등한 산업화와 기후변화의 역사적 부정을 부분적으로나마 치유할 수 있다.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 기후 부채 및 더 큰 범주의 생태 부채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세계적이고 민주적인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발전된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이 불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 잘 적응하고, 온실가스를 잘 감축할 수 있도록 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고 의무화된 자금 조달을 책임져야 하며, 기술 제공에 있어 특허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발전하는 나라들은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데 스스로의 역할을 찾으면서도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초국적 금융기관과 기부기관, 무역 메커니즘은 배상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3 전세계적으로 원시림의 삼림 벌채를 즉각 금지하고 선주민과 산림 의존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토착종 등 다양한 식물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나무 심기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진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산업화된 어업을 금지하고, 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회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수탈을 금지하고 천연 자원에 대한 인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

4 우리는 많은 기업, 정부 및 국제 금융 기관이 주창하는 순전히 시장 지향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거짓되고 위험한 해결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 여기에는 원자력, 농업연료, 탄소 포집 및 저장, 청정 개발 메커니즘, 바이오 숯, '기후 대비' 작물[역주: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가뭄, 폭염, 병충해에 강한 작물], 기후공학, UNFCCC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 '산림파괴와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REDD)'이 포함된다. 이런 해결책은 기후 위기를 실제로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환경 위협을 낳을

뿐이다. 탄소 거래와 상쇄 역시 거짓되고 부정한 수단인데, 이는 대기를 비롯한 지구의 공통 자원을 소유되고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 장점은 증명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들의 감축 의무를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정의하고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5 탄소 배출에 대한 형평성있는 세금: 우리는 배출 거래 쿼터제 대신 탄소 배출에 대해 형평성 있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탄소세를 통한 수입은 민중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며, 일부는 보상 및 적응과 완화를 위한 재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기후부채의 상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보상과 재정지원에는 여타의 조건이 따르지 않아야 하며, 시장 메커니즘과 금융 기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배출 감축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직접적 규제와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 에너지 확대에 더해 신속하게 증가하는 투명한 탄소세를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6 다자간 국제기구 및 초국적기업들 :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지역 개발 은행, 기부 기관과 무역 협정과 같이 부정의하고, 지속불가능하며 무책임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기관은 자원에 대한 주권을 존중하고 민중과 국가간 연대를 촉진하는 유엔 헌장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 초국적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선언문의 제안에 따라 우리 스스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7.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글로벌 운동

기후 변화에 관한 코펜하겐 정상 회담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장기적 과제를 촉진하기 위한 전지구적 '운동의 운동'이 시급하다. 현재의 지배적인 권력 구조와는 달리 이 운동은 반드시 아래로부터 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일상적인 정치 투쟁을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운동, 사회 운동, 노동조합, 농민, 시민 사회 및 기타 연합 정당의 광범위한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연대(혹은 동맹)은 새로운 접근법과 새로운 활동 유형을 필요로 하며, 지속불가능한 관행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새롭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클리마포럼09에 참여하는 민중, 지역사회와 사회운동조직인 우리는 이 포럼이 달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전지구적 운동의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이 선언은 우리의 이러한 운동이 나아가야 할 총체적 방향성을 드러냄을 통해 향후 운동의 발전을 위한 영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3. 코차밤바 민중협약(코차밤바 선언)

2010년 4월 22일

기후변화와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 회의

코차밤바, 볼리비아

오늘날 지구는 상처를 입고 인류의 미래는 위협에 처해 있다.

코펜하겐 협정의 결과 대로라면 지구 온난화는 섭씨 2도 이상 증가할 것이며 이럴 경우 지구에 발생할 피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20-30%의 생물종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영향 받고 지구 여러 지역은 가뭄과 홍수로 시달릴 것이며, 사막이 확장되고 양극 지대의 얼음과 안데스 및 히말라야 산맥의 만년설은 더 심하게 녹아내릴 것이다. 많은 도서 국가들은 사라질 것이고 아프리카는 섭씨 3도 이상의 기온 상승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세계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어 많은 지구 거주민들의 생존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이미 기아에 허덕이는 10억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소위 '발전된' 나라들의 기업과 정부들은 일부 과학 공동체와의 암묵적 공조 하에 기후변화를 기온 상승에 한정된 문제로 취급하며 그 근본 원인, 즉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던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가부장적이고 인간과 자연의 종속과 파괴를 기반으로 삼는 문명 모델의 최종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인류에게 경쟁, 진보, 무한 성장의 논리를 강요했다. 이런 생산과 소비 체제는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떼어내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고 물, 땅, 인간 유전자,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문화, 생물다양성, 정의, 윤리, 사람들의 권리와 삶 그 자체를 포함해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구는 원료의 원천으로 변형되고 인간은 존재 그대로가 아닌 그들이 소유한 것에 따라 가치가 평가되는 소비자와 생산수단으로 취급되었다.

자본주의는 축적 보장과 영토와 자연 자원에 대한 통제,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 산업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는 지구를 식민화하는 제국주의 체제에 다름 아니다.

인류는 거대한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다: 수탈과 죽음이라는 자본주의적 경로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존중하는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회복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인간 사이의 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선주민들의 지식과 지혜, 선조로부터 내려온 생활의 실천을 회복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우리와 분리될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지구를 생명체로 인정하는 '잘 살기(Living Well)'[역주: '부엔 비비르'의 번역]라는 사고와 생활방식을 통해 확인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 만물의 조화와 균형, 또한 인간과 만물 사이의 조화와 균형 추구
- 상보성, 연대, 평등
- 모두의 집단적 복리(well-being)와 기본 필요의 충족
-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
- 인간을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개입주의 제거
- 인간 사이, 또한 인간과 지구 사이의 평화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무한정하고 파괴적인 발전의 모델이 아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부자 나라들이 그랬듯 지구의 한계를 다섯 배나 넘어서는 생태 발자국을 낳는 발전 경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지구의 재생적 능력은 30% 이상이 소진되었다. 이런 속도로 지구에 대한 과잉 착취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2030년에 이르러 두 개의 지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한 부분을 이룰 뿐인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에서 인간의 욕구만 인정한다면 시스템 전체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권 보장과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위해 우리는 지구 권리에 관한 선언을 제안하고 다음을 적시한다:

- 생존하고 존재할 수 있는 권리
- 존중받을 권리
- 인위적 변형 없이 생태능력을 재생하고 생명의 순환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
- 차별화된 존재로서 상호연관 속에서 자율 규제를 통해 자기 정체성과 온전함(integrity)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생명의 원천인 물의 권리
- 깨끗한 공기의 권리
- 포괄적 건강에 대한 권리
- 오염과 독성물질, 방사능 폐기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온전함 혹은 건강한 기능을 위협하는 유전자 구조의 변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인간 행위에 의해 유발된-이 선언에서 밝힌-권리 침해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회복

‘공유된 비전’[역주: 코펜하겐 COP15의 합의문]은 “기후 시스템에 위협하다는 인위적 추론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명시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조에 따라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고자 한다. 우리의 비전은 발전된 나라들이 300ppm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되돌릴 배출 감축의 정량화된 목표를 약속하고 이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을 최대 섭씨 1도로 막기 위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성에 기초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곳곳의 민중, 사회운동, 나라들의 지원에 기반해 발전된 나라들이 지구 기후 시스템의 균형을 추구하는 우리 비전을 받아들이고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야심찬 배출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 이것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합의된 “장기적 협력에 대한 공유된 비전”은 기온 상승이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한계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역량 강화, 생산과 소비 패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구 권리의 인정과 같이 균형을 추구하는 통합적인 조치들을 포함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주된 유발자인 발전된 나라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롭고 효과적이며 과학적인 해법의 출발점으로 자신들의 기후 부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에 다음을 요구한다:

- 발전된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빼앗긴 대기 공간을 발전하는 나라들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는 발전된 나라들의 배출 감축과 흡수를 통한 대기의 탈식민화를 의미한다.
- 제약된 대기 공간 속에서 살아가며 발전 기회를 상실한 나라들의 비용과 기술 이전 필요를 책임져야 한다.
- 발전된 나라들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강요받게 될 수억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제약적인 이주 정책을 폐지하고 발전된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완전한 인권을 보장받으며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 기후변화의 충격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발전하는 나라들의 부채(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전된 나라들은 그들의 과도한 배출로 인해 촉발된 피해를 방지, 최소화,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발전하는 나라들의 부채를 지구에 대한 부채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는 지구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초점은 재정적 보상에만 놓여서는 안되며 회복적 정의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회복적 정의라 함은 지구와 지구 위 모든 존재의 존엄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해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교토의정서를 무효화하려는 나라들의 시도를 개탄한다.

우리는 배출 감축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나라들이 1990년과 2007년 사이 11.2%의 배출 증가를 보였음을 알린다.

동일한 시기 끝모를 소비 증가로 인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16.8%가 증가해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이 20-23톤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수치는 소위 '제3세계'라 불리는 지역 주민들의 평균 배출량 보다 9배가 더 많은 양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들의 배출량보다 20배 더 많은 양이다.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에게 '자발적이고 개별화된 계획'을 허용함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못하도록 하는 위법적인 '코펜하겐 협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협정은 온전한 지구 환경을 침해하고 섭씨 4도의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

2010년말 멕시코에서 열릴 차기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발전된 나라들이 1990년 대비 최소 50% 국내 배출 감축에 동의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2차 약속이행 기간(2013-2017)에 관한 교토의정서 내용의 수정을 이뤄내야 한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패를 은폐하는 탄소시장이나 기타 다른 상쇄 메커니즘은 배제되어야 한다.

상호보완적인 노력의 틀 안에서 일차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책임에 맞는 목표치 할당과 계획 달성의 약속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토의정서를 배출 감축의 경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부속서 1 국가[역주: 1992년 기준 OECD 국가를 포함한 발전된 나라들]이면서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미국은 모든 지구 거주민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경제 규모에 걸맞는 배출 감축 목표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민중은 기후변화의 해로운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고

발전된 나라들이 지금껏 배출했던 온실가스에 따른 영향을 감내하는 것에 그치는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을 거부한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결과는 전지구적 비상 상황에서 그들의 생활방식과 소비의 적응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적응이 한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과정으로,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되돌려놓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기후변화의 해로운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지금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나라를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또한 기후변화 대응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재정 매커니즘의 일부로서 '적응 기금'이 필요하다. 이 기금은 발전하는 나라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과 비용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금은 또한 현재와 미래의 피해, 극단적이고 점진적인 기후이변으로 인해 상실된 기회, 그리고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초월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예컨대 전통적인 '잘살기'(부엔 비비르) 방식의 파괴와 같은 -추가적 비용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

몇몇 나라에 의해 만들어져 발전하는 나라들에 강제적으로 부과된 '코펜하겐 협정'은 이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응과 완화를 위한 재원에 대한 접근에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발전하는 나라들을 가르고 대립을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제 협상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기준으로 발전하는 나라들을 분류해 논쟁과 불평등, 분열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구 온도를 낮춰야 하는 인류가 당면한 이 엄청난 도전은 농업 분야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선주민과 농촌 농민들이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과 선조들의 방식 및 관행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농업과 식량주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종자, 토지, 물, 식량 생산을 스스로 통제할 민중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구와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을 통해 충분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접근과 모든 부족과 민중들의 자율적인-즉, 참여적이며 공동체적이고 공유적인-생산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 변화는 농업과 전 세계 선주민과 농민들의 삶의 방식에 심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 실현과 동떨어진 글로벌 자본주의의 사회 경제 문화적 생산모델과 시장의 식량생산 논리를 갖춘 대기업농업은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대기업농업의 기술적이고 상업적이며 정치적인 접근은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전세계 굶주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협정들, 모든 형태의 생존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적용, 농약과 유전자변형을 포함하는 현재의 기술적 패키지, 바이오 연료, 지구 공학, 나노기술 등 지금의 위기를 더 악화시킬 뿐인 잘못된 해결책을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본주의 모델이 초대형 기반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방식과 추출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침탈하고, 물을 사유화하고, 토지를 군사화하고, 선주민을 그들의 땅에 내쫓으며, 식량주권을 억제하고 사회 환경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지구의 물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볼리비아 정부가 물을 기본 인권으로 인정한 제안을 지지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협상은 플랜테이션[역주: 산업화된 대규모 농장]을 숲의 정의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다. 단일경작 플랜테이션은 숲이 아니다. 우리는 협상을 위해 토종 숲과 정글, 다양한 지구 생태시스템만을 인정하는 숲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은 온전히 인정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협상에 도입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숲이 선주민과 그들의 전통 공동체의 영토 안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파괴와 황폐화를 방지하고 토종 숲과 정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과 행동은 토지와 영토에 대한 선주민들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REDD(산림파괴와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와 REDD+, REDD++와 같은 버전의 시장 메커니즘을 규탄한다. 이런 정책은 선주민 권리와 ‘자유의지에 따른 사전인지동의’에 대한 권리, 또한 개별 국가와 민중들의 삶의 방식, 자연권을 침해한다. [역주: REDD가 숲 보호를 명분으로 선주민들을 살던 땅에서 내몰고 땅에 대한 접근을 폭력적으로 막는 것에 대한 비판]

오염에 책임있는 나라들은 민중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주민들의 유기적 구조의 보존을 위해 산림 복원과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재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보상은 직접적이어야 하며 발전된 나라들이 탄소시장 밖에서 약속한 기금이 아닌, 이에 추가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 기금 절대 탄소상쇄를 위해 사용되어선 안된다. [역주: ‘탄소중립 휘발유’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숲 보호’ ‘나무 심기’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배출권을 사는 방식에 대한 비판]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산림 정책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거나 특정 조건에 따르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토착민에 의해 숲의 씨앗과 과실나무, 토종 숲과 정글을 포함한 생태계가 관리 운영되는 전지구적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모든 정부는 숲의 관리권 이전을 폐지하고, 원유를 땅속에 그대로 두어 보존하며, 산지에서 탄화수소의 탐사와 착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국제적 인권 기준과 선주민 권리를 인정, 존중, 보장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ILO 조약 169에 따른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등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정책, 각종 조치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각별히 모든 나라들이 선주민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토와 토지, 자연 자원에 대한 선주민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협상과 기후변화 대응 조치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선주민들의 협의권, 참여권, 자유로운 사전 인지동의권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실행을 요구한다.

오늘날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고 국경 안팎을 넘나드는 이주는 그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추정에 의하면 1995년에 이미 2500만명의 이주민들이 있었다. 지금은 그 숫자가 5000만명 정도라 추정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강요받게 될 이들은 2억에서 10억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발전된 나라들은 기후난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을 자국 영토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의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난민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이것을 모든 나라에서 지켜야 할 의무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제양심재판소를 설립하여 모든 국가, 기업, 기관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신국가, 이동 경로, 목적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 침해를 고발, 가시화, 문서화, 판결 및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협약에 따라 발전하는 나라들에 제공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발전된 나라들은 정부개발원조(ODA)와 공적 재원에 더해 발전하는 나라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GDP의 최소 6%를 기금으로 기탁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규모가 군사비에 사용되고 이보다 5배가 넘는 재원이 부실 은행과 투기금융을 구제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전지구적 우선순위의 문제이자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 이 기금은 직접 지원의 형태를 띠고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들의 주권이나 자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비효율적 방식을 볼 때 2010 멕시코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새로운 기금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메커니즘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기후변화당사자국회의(COP)의 권위 하에 발전하는 나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된 부속서 1 국가들의 재정 지원 약속 준수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나라들은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엄청난 배출 증가를 보였다는 점은 이미 언급되었다. 특히 탄소시장은 돈벌이 수단이 되어 지구를 상품화했다. 탄소시장은 땅과 물, 생명 자체를 약탈하고 황폐화시킬 뿐이며 기후변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투기와 중간 브로커들의

난리를 보여주며 허술하고 불확실한 금융시스템을 시장이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와 지구의 돌봄과 보호를 시장의 손에 맡기는 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 방식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오늘날에도 협상이 탄소시장 확장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고자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발전된 나라들이 했던 약속을 실행할 것과 발전된 나라들이 기술을 시장화하기 위해 제안한 '기술 전시(technology showcase)'를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기술에 대한 참여와 통제, 관리, 평가, 교류를 위한 다자간, 학제간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술은 유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깨끗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적절하며 지적재산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술의 목록과 자금 조달을 위한 기금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특허권은 용이한 접근과 낮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독점에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져야 한다.

지식은 보편적이며 사적 소유나 사적 유용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지식은 또한 사적으로 소유되고 전용되는 기술의 형태를 띠어서도 안된다. 발전된 나라들은 발전하는 나라들이 기술과 혁신을 위해 연구 센터를 짓고 전통적인 '잘 살기(부엔 비비르)' 방식을 보호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술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지구의 파괴를 막고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잘 사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통적 삶의 방식과 앎, 지혜와 영성(靈性)을 복구하고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

발전된 나라들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약속과 의무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없고 지구와 인류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후와 환경 범죄를 방지할 국제법적 체제가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국가와 산업, 기업, 개인의 오염 행위와 기후변화 유발을 방지하고, 판결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는 '국제 기후 및 환경정의 재판소'의 설립을 요구한다. 온실가스 감축 약속 등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합의에 따르지 않는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국제 기후 및 환경정의 재판소'에서의 소송은 지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엔의 모든 구성원 국가들이 '국제 기후 및 환경정의 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모두가 유엔의 심도 있는 개혁을 제안하고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으로 내몰고 우리는 발전된 나라의 지도자 몇몇이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회의에서 이런 시도는 실패했다. 이런 방식은 우려스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관해 모두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전지구적 총선거나 기후변화에 관한 대중적 협의방식이 필요하다: 발전된 나라와 초국적 기업의 배출 감소 수준, 발전된 나라들에 제공해야 할 재정 지원, 국제 기후정의재판소, 지구 권리에 관한 선언,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 전지구적 총선거나 대중적 협의체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을 지는 그 준비 과정에 달려 있다.

이 '민중협약'의 결과를 실행하고 우리의 국제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를 위한 글로벌 민중운동'을 제안한다. 이 운동은 상호보완의 원칙과 구성원의 출신과 비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세계곳곳의 행동을 조정하고 연결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속서 1의 발전된 나라들이 멕시코에서는 지금의 법적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할 것과 이 협약에 담긴 제안들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구를 위한 글로벌 민중운동'을 건설하고 올해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기후변화회의의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2011년에 두번째 기후변화와 지구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회의를 개최할 것에 동의한다.

4.

그린뉴딜을 위한 페미니스트 의제: 원칙과 가치 (2020)

미 의회에 제안된 그린뉴딜은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고 사회운동의 구축과 교육, 전략,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기후위기 의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부상하게 된 이 순간, 정책 논의에 교차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비판적 페미니스트와 기후정의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집단/집합체로서 그린뉴딜과 운동가, 진보적 정책 제안자들의 노력으로 미국의 기후대응 혹은 무대응의 지구적 함의를 확인하는 권리에 기반한 정책과 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된 기회를 환영합니다.

기후위기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린뉴딜의 접근 방식은 교차적이고 페미니스트 원칙에 투철하며 역사적 억압에 맞서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그린뉴딜은 여성의 리더십에 중심을 두고 식민주의와 반흑인 인종주의의 역사적 영향을 다룰 수 있는 변혁적 페미니스트 의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린뉴딜은 모든 종류의 억압을 끝내야 하며 흑인 여성, 선주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LGBTQIAP+), 남반구 주민,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기후위기 최일선 공동체에 의해 주도되고 구체적으로 주장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와 자원 추출, 노동 착취, 자연의 상품화, 정착민 식민주의[역주: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정착한 백인들에 의해 전개된 식민주의의 형태], 제국주의, 군사주의가 긴밀하게 맞물린 체제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북반구가 쌓은 부의 원천인 노예 착취와 전지구적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심화시키는 구조적 인종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역에서 군사비 지출, 개발에 이르기까지 상호연결된 정책 부문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지구와 탈착취적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그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자주의와 민주적 법 지배의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와 책임의 원칙을 따르는 그린뉴딜을 주장합니다:

- 미국의 경제, 환경, 정치 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의 절박한 필요성은 다음의 조치들을 수반합니다:
 - 경제 불평등을 시정하고 미국 정책의 전지구적 영향에 대한 책임 묻기
 - 자원의 민영화/상품화에서 재생적, 지속가능한, 협력적이며 집단적 모델로의 전환
 - 추출 경제와 군산복합체에 대한 투자 회수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재투자
-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 노력, 기후위기 해법, 미국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최일선 공동체의 리더십 지원. 여기에는 선주민 권리 존중과 보장, 환경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노력, 환경 파수꾼에 대한 범죄화에 맞서는 것이 포함됩니다.
- 페미니스트 운동과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입각한 가부장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권력구조 해체를 비롯해 정책 입안과 공공 담론에서 여성 리더십, 젠더 정의, 인권을 우선 순위에 두기.

정책결정자, 활동가, 공동체들이 그린뉴딜의 윤곽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우리는

1. 모든 행동에서 교차적 젠더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심대하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젠더는 섹슈얼리티, 인종, 출신국, 계급, 장애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권력과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규정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더 가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린뉴딜은 착취와 배제의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차별적으로 받는 영향을 해결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현실에 맞서 싸우며 해로움에 대한 배상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임금의 형평성, 유급 가족 휴가와 무료 아동 돌봄을 포함하는 사회 정책과 녹색 일자리로 여성들이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광산 지역의 성폭력에서 산업농장의 여성 노동자들의 착취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젠더 폭력을 인정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일국적 차원의 기후 정책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례없는 기후위기를 당면한 우리는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민중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또한 기업, 군사, 착취적 의제에 포획되지 않는—페미니스트적 대외 정책을 따를 때에만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와 국제 협력만이 아니라 남반구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동안 미국이 역사적으로 세계 제1의 오염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남반구에 대해 진 빚을 보다 야심차고 신속한 배출 감축, 기후 재정에 대한 전례없는 규모의 투자 약속, 남반구의 피해 공동체, 여성과 소녀, 환경 수호자들에 대한 배상, 남반구의 정의롭고 재생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무역과 세금 정책,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추출주의적 개입을 중단하는 것을 통해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야기한 기후위기로부터 탈출하는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해야 하며 더이상의 이주민과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응 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추출 산업을 보호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평화와 인권을 파괴하는 미국 주도의 군산복합체에 맞서야 합니다.

3. 제도화된 가부장제와 인종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몸의 범죄화에서부터 인종주의적 선거구 조작과 투표 방해에 이르기까지, 또한 정부의 홍수 보험에서 특정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학교와 교도소를 연결하는 유색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화 시도까지 체제적 억압은 우리의 공동체, 운동, 정책결정의 공간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이와 같은 체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기후 해법은 계속 방해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주변화된 공동체의 목소리가 제도화된 억압의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깨야 하고 서로 간에, 또한 정책결정자들을 향해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4. 선주민 권리와 리더십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주민들은 지구 면적의 25%와 80%의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책임집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선주민 주권과 해법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선주민 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역주: 개발을 비롯해 선주민 땅에서의 모든 정부 계획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확보를 필수화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자연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체제적 수준에서 착취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방식과 맞서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뿌리는 기업의 탐욕,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인간과 지구의 복리 보다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경제체제에 있습니다.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체제는 권력과 생산에 있어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또한 미국과 같은 정착 식민지 내에서의 신식민지적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무한한 물질적 성장의 추구는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는 화석연료, 광산, 오염 산업의 힘을 키울 뿐입니다. 이런 생산 방식에 체계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 운동의 토대 구축, 노동과의 연대에 기반한 조직화, 대중 교육과 동원이 필요하며, 이런 작업은 정의, 형평성, 권리, 지속가능성, 자연과 생태적 균형에 대한 존중에 뿌리내린 경제로의 변혁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6. 재생산 정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투쟁과 몸의 자율성을 위한 투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공기, 땅을 오염시키는 독성 화학물질은 재생산 건강 등 우리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체제적 부정의의 현실에서 흑인, 선주민, 라틴계 여성들은 종종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인구 증가에 기후변화의 책임을 돌리고 여성의 재생산 능력 탓을 하는 거짓 우려나 주장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글을 읽고 기후, 젠더, 재생산 정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산업 정책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에는 모든 상황에서 신체적 자율성, 성과 재생산 권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7.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공동체가 주도하는 해법을 보장해야 합니다. 로컬과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기후 정책을 만드는데 여성 그룹과 지역운동의 리더십이 보장될 때 그 결과는 더 민주적이고 강력하며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토지와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정책이나 개발 계획과

관련해 그린뉴딜은 공동체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며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재정, 형평성 있는 에너지 공급, 정의로운 주거와 교육 정책 등 그린뉴딜이 제시하는 해법은 공동체가 주도하고 공동체가 소유하는 해법이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또한 여성과 공동체가 제시하는 기후위기 해법을 기반으로 삼아 지원하고 끌어올려야 합니다.

8. 기후변화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되고 해로운 대응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재생에너지로의 100% 전환을 요구해야 하며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광산 추출, 화석연료, 대규모 산업농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지속시키고 억압을 영구화하며 그 해로움을 그린워싱하는 거짓 '해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산업체가 돈만 내면 오염할 수 있게 허용하는 탄소 거래, 대부분이 여성인 소농과 자급자족농을 희생시키며 산업농만 살찌우는 바이오 연료, 위험한 핵발전소, 탄소포집저장이나 다른 기술적 해법을 핑계로 삼는 천연가스 추출, 생물종다양성, 식량 주권, 생존권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대규모 댐, 지구공학이나 바이오 에너지 등이 포함됩니다.

9. 체계적으로 페미니스트적 대안을 중심에 두는 재생 경제를 창조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권력과 부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의하고 추출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자연의 재생능력과 균형을 존중하는, 새롭고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사유화와 상품화로부터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생산과 자원 사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DP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경제적 지표이며 생산 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은 전세계에서 여성들이 가사, 육아, 노인 돌봄 등의 노동을 거의 전담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노동은 항상 무보수에 과소평가 되었고 사회적 시선에서 지워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에 기반해 구축되었고 돌봄 노동에 의존합니다. 돌봄 노동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저탄소 공동체 기반의 노동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새로운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0.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는 청(소)년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합니다.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재앙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대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저항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후변화와 맞서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역할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와 우리의 생존은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를 넘어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에 따라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가 바라는 변화를 지금 만들어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5.

미래를 위한 금요일 (2021, 2022)

2021년 9월 24일 #uprootthesystem 글로벌 기후행동 취지문

기후위기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종 차별주의, 성 차별주의, 비장애인주의, 계급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는 기후위기를 증폭시키고 (역으로) 기후위기는 역으로 이런 사회경제적 위기를 증폭시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투쟁과 해방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 힘을 모으지만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과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MAPA(Most Affected Peoples and Areas;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지역)는 최악의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체제적 부정의, 그리고 그들의 노골적인 탐욕으로 MAPA의 땅을 황폐하게 만든 북반구의 엘리트들 때문입니다. 과잉 착취당한 국가들과 사회에서 주변화된 사회집단들은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비롯한 역사상 모든 위기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홀로 남겨져 생존을 알아서 책임져야 합니다.

환경의 보호자들과 노동자들의 지도를 따라 대중적 힘을 모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역사적으로 부정의한 체제를 통해 이득을 봤던 가장 부유한 엘리트들을 향해 MAPA에 대한 배상, 북반구의 급격한 배출량 감축, 공정한 백신 공급, 부채 탕감, 그리고 기후 재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단지 문제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집단 행동을 통해 만들어낸 승리들은 청(소)년들이 모두의 더 나은 미래, 사람과 지구가 우선이 되는 미래를 위해 부문과 세대를 가로지르는 연대와 투쟁의 필요성을 입증할 따름입니다.

2022년 3월 25일, 9월 23일 #peoplenotprofit 글로벌 기후행동 취지문

우리가 살고 있는 재앙적인 기후 시나리오는 식민주의, 추출주의, 자본주의와 같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그래서 대체되어야 할 사회경제적 모델에 기반해 수 세기에 걸쳐 진행된 착취와 억압의 결과입니다. 부자 나라들이 전지구적

온실가스의 92%를 배출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하위 50%에 비해 두 배나 많은 배출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과 지역들(MAPA)이 주도하고 과거의 투쟁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후 배상을 요구합니다.

기후배상

기후배상은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민중에게 되돌려주는 변혁적 정의의 과정을 말합니다. 배상은 대출(즉, 빚)의 방식이 아니라 선주민, 흑인, 반가부장주의적이며 주변화된 다양한 공동체들이 땅을 되찾는 방식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공동체들의 기후 적응, 피해와 손실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 부, 기술, 정보, 돌봄, 정치 권력의 재분배, 그리고 많은 경우 사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 방향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상층에서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투쟁은 계급투쟁입니다. 대부분 부유한 백인, 이성애자, 남성으로 구성된 북반구의 지배 계급, 기업과 정부는 식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주의, 백인 우월주의, 착취를 통해 이득을 취하며 지구와 그 거주민들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파괴해왔습니다. 그들은 '발전' 혹은 끊임없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계획적으로 남반구의 생태계와 민중을 희생시켜왔습니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 체제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식민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은 기후위기를 야기한 모든 체제의 핵심에 있고, 기후배상이라는 전략을 따르는 탈식민주의는 지금 가장 훌륭한 기후행동입니다. 가장 부유한 1%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의도된 무지 혹은 무관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수익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들의 이윤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전세계 다양한 사회부문과 손 잡고 가장 주변화된 이들의 주도 아래 민중들이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으십시오. 서로 손을 맞잡고 #이윤말고사람이 우선시되는 체제와 공동체를 건설하십시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홈페이지 <https://www.climatejusticealliance.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limatejusticealliance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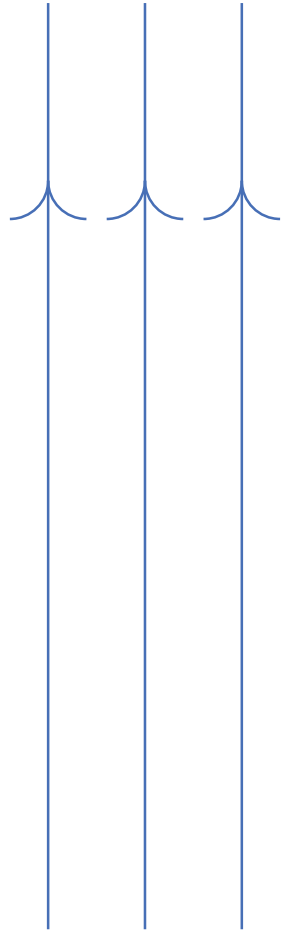
이메일 climatejusticealliance21@gmail.com

펴낸날 2022. 10.20

펴낸곳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글쓴이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디자인 사과나무



Climate Justice
Declaration Movement